

## <속기록 초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기자실에 방문했습니다만, 새해 인사드리러 방문했었습니다만, 못 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가 내일 대통령 권한대행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아마 드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자료 중에서 주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 그리고 금년도 금융위 업무계획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자료 중에서 '2017년 주요정책과제'라고 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금융정책 여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라든가 또 신행정부의 정책방향, 그리고 유럽, 중국 등의 경제변화 이런 등등의 요소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만일 시장금리의 상승이 있다고 한다면 서민·취약계층, 그리고 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 그리고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완화 등 국내 리스크 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분야별로 전문가간담회, 그리고 대국민 서베이를 한 결과 내년에 저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과제는, 첫 번째는 약 45%가 '가계부채 관리', 그다음에 28%가 '금융개혁', 그리고 '서민금융 강화' 이 과제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년도 금융위원회 정책추진방향을 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강화하고, 죄송합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그리고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지속, 그리고 금융시장의 질서확립의 4개의 핵심과제를 담아서 저희가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민생안정입니다.

민생안정을 위해서 서민금융 지원확대, 중소기업 지원강화, 취약차주에 대한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위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잠재력을 확충 지원하고, 창업·기술혁신기업을 지원하고, 금융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금융개혁 과제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3대 추진전략, 12개 핵심과제를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한 정책과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물경제 활성화, 즉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금년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또 전반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추경이나 혹은 통화정책 등의 더 거시적인 정책수단이 있겠습니다만, 이는 여러 가지 큰 의미에서의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보다 더 여러 가지 지표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고 또 대응에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융 부문이, 보다 유연한 금융 부문이 보다 적극적이고 그리고 경기대응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의 틀을 이용해서, 즉 산은·기은, 신보·기보 등을 통해서 정책금융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경제활력 제고를, 즉 실물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책금융기관은 사상 최대 규모인 186조 7,000억 원, 약 187조 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요 분야별로 보면 먼저 중소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전년의 계획 대비해서 약 6.8조 증가한 128조 2,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중 부문별로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창출형, 그리고 수출형 중소기업에 전년 대비해서 2조 원 이상 증가한 25조 6,000억을 신·기보를 통해서 보증공급 하고,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자영업자, 즉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대해서 총 12조 원의 자금을 기업은행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은 성장기반 확대를 위해서 작년 대비해서 2.2조 원 증가한 21조 8,000억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차별화된 그리고 맞춤형의 육성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산은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는 이 4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공급 계획을 총괄해서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미래의 신성장도 역시 우리가 올해 주요한 과제로서 육성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첨단제조 분야라든가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작년보다 5조 원 증가한 85조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이 85조 원의 공급 숫자는 4개 정책금융기관이 주가 됩니다만, 이외에 수은이라든가 무보라든가 성장펀드, 성장사다리펀드 이런 숫자를 총체적으로 합한 숫자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산은이 약 20조 원을 할당해서 신성장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늘려 나간 정책자금의 공급규모를 조기에 집행하겠다, 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저희가 앞으로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중에 작년보다 지원 비율이 2%p 높은 25%를 특별하게 1/4분기부터 집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입니다.

가계부채는 그동안 누차 설명을 드렸습시다만, 금융적 방법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증대시키거나 혹은 각종 경제변수, 예를 들자면 금리라든가 부동산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가계부채입니다.

금융적 측면에서 저희가 취한 방법은 총량규제를 하거나 LTV·DTI를 움직이거나 이런 단기적이고 대중적인 방법보다는 근본적이고 구

조적인 방법에 의해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것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한 ‘처음부터 갚아 나가고, 그리고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그것을 우리 금융권에 전반적으로 안착을 시키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고, 작년에 그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은행, 보험 그리고 이제 연초부터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까지 망라하는 관리체계를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로 가급적이면 빌려 주고 처음부터 갚아 나가는, 즉 조금씩 갚아 나가는 이 관행이 고정금리 비중의 경우에는 41%까지 저희가 늘렸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45%까지 늘려서 목표를, 당초 목표가 42.5%였었는데 이것을 당겨서 45%까지 2017년에 달성하겠다는 것이 목표이고요.

두 번째, 분할상환 비중은 당초 목표가, 올해 목표가 50%였는데 55%까지 상향조정 시켰습니다. 그래서 45%, 55%까지 고정금리 분할상환의 비중을 높여 나가겠다, 하는 질적인 구조개선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올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것이 가계부채에 대한 질적인 구조개선이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두 번째 단계로서 DSR,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DSR의 발전을 통해서 차주 입장에서 ‘과연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심사를 여신심사의 관행을 바꾸는 그런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노력을 올해부터 병행하겠다는 그것이 올해 가계부채 관리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질적인 구조개선만을 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즉 여신심사를 할 때 과연 그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추어서, 또 차주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서 주담대라든가 비주담대라든가 혹은 신용대출을 공급하는 이런 여신 관행이 정착된다면, 우리 가계부채로 인한 리스크를 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현재는? DTI 한도규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권에 한정해서 60%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획일적인 비율로 적용되고 있어서 금융회사는 단지 이 DTI 비율을 맞추면 건전성 관리에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식이 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고, 차주 역시 이 규제비율 내에서는 실제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라는 일종의 권리로 인식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DTI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DTI를 산정할 때 해당 대출, 즉 주담대에 주로 쓰이니까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나머지 대출, 즉 비주담대출이라든가 이자대출... 신용대출이라든가 이 부분의 경우에는 원리금 전체를 소위 말해서 이 부채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머지 대출은 이자부분만, 소위 말해서 분자의 부분이죠. 분자의 부분에서 이자의 부분만 감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 자세하게 산정식에 대해서는 8페이지에 붙였으니까 그때 보시면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돼 보니까 주담대 이외에 신용대출, 비주담대출의 경우에 상환의 부담을 그만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DTI의 현실

이었습니다.

또 소득 측면에서 보면, 차주의 소득창출 능력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정교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근로소득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것이냐? 혹은 보유자산이, 종류별로 이 보유자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동화가 가능한 것이냐? 혹은 보유자산에 소득창출 능력이 있는 것이냐? 하는 여부 등의 정교한 평가모형이 없었다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즉,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수단으로서의 DTI를 유지는 하되, DSR이라고 하는 작년 말부터 신정원의 설립에 따라서 저희가 파악 가능하게 된 'DSR'의 개념을 보완해서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심사능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통상 DSR은 DTI와의 차이는 딱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 기타 대출을, 주담대 이외의 나머지 대출에 원금을 부담액에, 즉 분자에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이 차이가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환능력을 감안하실 때 주담대 이외에 비주담대출 혹은 신용대출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이 그분의 상환능력 혹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는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의 경우를 본다면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홍콩 이런 데가 주로 DTI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나라들인데, 영국은 LTI를 DSR로 바꾸는 지금 과정에 있고, 미국이나 캐나

다, 홍콩 등은 전부 DSR이라고 하는 지표를 통해서 심사능력을 파악하거나 혹은 은행에 심사를 해가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DSR이라는 개념을 가계부채 관리에 좀 더 써서, 좀 더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가계부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DSR을 그런데 한꺼번에 다 적용하기에는 저희 금융회사들이 아직까지 심사의 능력이라까 이런 것이 아직 부족하고, 또 이것을 급격히 시장에 적용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지나친 부담을 감안해서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금년에는 1단계로 DSR이 이제 12월부터 공급되기 시작했으니까 이 DSR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잘 활용하는 금융회사의 사례를 감안해서 모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선진국이 DSR을 관리하고 있는 활용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회사의 자체 여신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모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DSR을 우리의 새로운 관리지표로서 금융회사들이 혹은 새로운 심사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것을 점차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올해 할 일입니다.

DTI는 현재의 규제수준 60%, 수도권 60%를 유지하겠습니다. 하는

데, 앞서 말씀드린 DTI의 여러 가지 소위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즉, 소득 산정 시에 소득 부분에 주로 이것이 보완되게 되어 있는데, 차주의 장래소득을 증가할 가능성, 그다음에 소득의 안정성, 그다음에 보유자산의 평가,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막연한 얘기 같아서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40세 미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만, 즉 월급을 받는 소득자만 이것을 장래소득으로 인정해 줘야만, 앞으로는 비근로소득자의 장래소득을 인정해 줄 수 있게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한도가 분모 부분, 소득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조금 더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날 수 있겠죠.

자, 역으로 한도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일시적인 소득이거나 혹은 소득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을 불안정성 때문에 깎아 내는 것입니다, 소득을. 그렇게 되면 분모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한도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DTI에 대해서는 60% 규제는 유지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보다 소득 부분에서, 즉 분모 부분에서 정교화시켜서 만들어 나겠다는 것이 올해 해야 할 작업입니다.

작업이 자체로서는 굉장히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형도 만

들어야 되고 또 상황이 케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잘 다듬고 정교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DSR을 활용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 모형을 개발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에, 즉 금년에 만든 표준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여신심사 모형을 개발해서 시범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즉, 이때 여신심사의 모형에 DSR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리지표가 여기에 반영돼서 이 모형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진국처럼 DSR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여신심사, 즉 그 차주가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DSR 정보를 차주에게도 아울러 제공해서 차주가 어떤 부채상태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활용방식도 저희가 개발해서 확산하겠습니다.

그리고 DTI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소득 부분을 크게 보완한 신 DTI 기준을 금융권역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은행권 먼저 시행하고, 이것을 2금융권까지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3단계는 2019년 이후입니다. DSR을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의 종합

적인 관리기준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즉, 이것을 은행의 여신심사 틀이 있습니다. 모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모형에 집어넣어서 차주가 오면 그 차주의 소득이나 대출 받고자 하는 규모에 따라서 대출이 가능한지, 또 얼마가 가능한지, 금리는 얼마를 적용해야 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내에 DSR을 완전히 흡수시켜서 관리기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 DTI 규제는 유지하되 DSR을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간접적인 감독지표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DSR의 높은 대출의 총 비중을 저희가 제한하거나 연체하게 되면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조정을 할 때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하거나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감독상의 방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대출에 대해서 DSR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DSR을 가지고 전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감독지표로 활용하겠다, 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예도 거기에 기재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DSR이 중심이 되는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좀 더 구체화해서 1/4분기 중에 마련을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단기적 추진과제, 즉 표준모형을 만드는 것, DTI 산정방식을 합리화하는 것,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는 DSR에 관한, DTI와 DSR에 관한 참고자료를 붙였습니다.

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융 취약계층의 지원확대 방안입니다.

우리가 금리가 상승이 되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역시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이에 견뎌내고, 그리고 자칫 좀 더, 더 많은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이분들을 보호하는 것, 또 높은 금리에 의해서 이분들이 받아 써서 더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일종의 금리인상에 대비한 중요한 방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취약계층 부문별로 저희가 여러 가지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해서 지원책을 확대하거나 혹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분들을 지켜드리고자 했습니다.

먼저, 청년·대학생 대상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자금으로서 햇살론을 지금 약, 작년 경우에 한 600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이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임차보증금, 저소득가구의 대학생들이 사실은 월세를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해, 매해 월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임차보증금을 저희가 대출하는 제도를 신설할까 합니다. 이 또한 햇살론을 통해서 하게 되고 약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금리는 4.5%의 저리자금을 지원을 해서, 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월세로 살거나 혹은 전세로 들어가더라도 고금리의 부담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대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신설하고요.

그리고 햇살론, 청년·대학생들의 햇살론의 거치기간이 4년, 상환기간이 5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취업이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거치기간, 상환기간을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 쉽게 연체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젊은 세대들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성실히 상환하신 그런 분들에게는 취업알선지원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한부모가정 등 이런 별도 취약계층에 놓여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의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소금융에 대한 취약계층 생계자금은 저신용 장애인에 대해서 1,200만 원에 금리 3%짜리 자금을 미소금융에서 대주고 있습니다만, 이 지원대상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약자에 있다고 판단되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이런 저신용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1,200만 원에서 금리는 역시 3~4.5%로 취약계층의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소금융의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그리고 계층별로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생계자금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자금. 예를 들자면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학자금대출, 새터민 같은 경우에는 살 집이 있어야 되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이렇게 특성에 맞게 또 각 계층별로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에 맞게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 의료비 등 긴급자금 수요로 고금리 대출에 빠지지 않도록 긴급자금 지원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다 확정시키고, 수요조사 그리고 지원내용을 확정을 시켜서 2/4분기부터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방패막이 되는 것이 역시 주담대를 받은 취약계층들이, 어려운 서민들이... 자, 연체를 하게 됩니다. 연체를 하면 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매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살 집 없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한계차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방패막도 미리 마련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을 보시면 먼저 연체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체 이전에, 연체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실적이나 폐업 등 재무적인 곤란을 겪게 된다면 일정기간 동안 원금상환유예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사전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환유예제도를 안내하는, 즉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인 제도와 함께, 12페이지입니다.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인력을 은행 거점별로 배치를 하거나 또 혹은 서민금융 지원과 연계를 통해서 신용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연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먼저 연체이자율에 대해서 산정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은행의 경우에 10 내지 11 내지 15% 수준인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을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가를 연구용역을 거쳐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한번 보시면 연체로 발생하는 비용,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원금을 상환시키는, 즉 상환해야 하는 데 필요한 부담뿐만 아니라 정상이자를 일단 냈어야 하니까 정상이자를 내야 되겠죠. 그리고 연체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될 때 생기는, 연체가 발생할 때 생기는 은행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거나 또 재산조사도 해야 하고.

그래서 회수에 필요한 비용이 과연 적정하게 연체금리에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혹은 과도하게 이런 것이 합리적 기준 없이 반영된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합리적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는 담보권 실행입니다.

사실은 주담대 하나 받아서 연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연체를 했다는 이유로 경매에 부쳐지고, 그래서 어디 오갈 곳이 없게 되는 이런 딱한 경우들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땅히 최대한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담보권을 실행할 때 반드시 차주와 상담을 의무화시키겠습니다.

니다. 그래서 자, 집이... 만약에 '내가 갈 곳이 없다, 주거안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최대한 1년간 경매를 유예해 줍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대개 연체가 발생해서 주담대의 경우에는 한 2개월 내지 3개월이면 경매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유예를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경매를 진행해도 좋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담보물 매매중개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라고 하는, 법정경매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집이 아주 싸게 팔리는, 즉 가치보다 훨씬 더 급하게 팔려서 싸게 팔리지 않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중개프로그램을 저희가 금융회사에서 활성화시켜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 내용은 지금 합동T/F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중에 이 세부 지원방안을 확정시켜서 저희가 작동시키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입니다.

추진배경은 생략하고, 추진방안. 물론,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기업구조조정은 일관된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결코 지연하거나 피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기민감 업종에 대해서는 해운 그리고 조선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자구노력 등을 이행시키는 한편,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그리고 해운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타 업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상시적인 구조조정, 즉 신용위험평가를 하고 전체 계열 혹은 개별 기업에 대해서 신용위험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이 체계의 경우에는 저희가 구조조정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이상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조조정의 보조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캠프(KAMCO)가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자산을 매입해서 유동화시켜 주는 이 재임대 프로그램을 5,000억까지 저희가 5배 정도 늘려서 지원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서 이와 같이 일관성 있게 해나간다는 것은 그동안 누차 드렸던 말씀이고, 이제 구조조정에 좋은 새로운 틀을 만드는 일에 올해는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조조정에서는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비중을 두고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즉 보다 시장에서 구조조정 기업들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암코를 매각을 중단하고 지금 현재 구조조정의 하나의 중심체로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또 그러한 기능을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밖에도 실제로 구조조정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금융회사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부실기업들을 잘 털어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즉, 털어내는 순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시장에 내놓고 팔려고 해도 그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 간에 가격이 잘 맞지 않습니다. 은행은 당연히 비싼 값으로 팔려고 하고,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펀드나 유암코나 이런 시장의 구조조정 전문기구들은 굉장히 싸게 사려고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맞지 않아서 통상 기업의 이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3의 독립적 평가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구조조정기업을 인수해서 restructuring 한 다음에 기업을 정상화시켜서 파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많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조조정의 새로운 틀은 역시 3월부터 법원이, 회생법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파산부가 이제 법원으로 승격이 돼서 규모도 커지고 전문성도 높아집니다.

이 법원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이라고 하는, 즉 미국의 파산법의 챗터 11에 해당하는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동안 법원과도 수많은 협의를 거쳤고, 또 회생법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금융위가 법원과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

계를 해왔습니다.

이 플랜의 장점은 무엇이나면, 기초법상 워크아웃과 그리고 도산법상 회생절차, 즉 통상 법정관리라고 하죠. 이 장점을 양쪽에서 탄 것입니다.

즉, 기초법상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워크아웃에 들어와 있는 금융회사 이외의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채와 같이 시장성 부채라든가 혹은 상거래 채무라든가.

자, 그런데 이 프리패키지드 플랜이라고 하면, 그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 법정관리라고 하는 것의 틀에 들어가게 되면,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정관리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이것은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원치 않는 것이고, 또 해 본 일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신규자금 지원이 대부분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과 워크아웃의 장점인, 즉 신규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통합도산법. 즉 법정관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귀속력, 그 광범위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2개를 따서 만든 것이 프리패키지드 플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채권단이 신규 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채권단, 금융회사들이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즉시인가를 해서 이 워크아웃이 좀 더 공적인 귀속력이 광범위하고 가질 수 있도록 법원이 거기에

서 인가를 하고, 이 인가 계획에 따라 기업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틀을 발전시키는 것이 구조조정에서 올해 주요하게 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1분기 중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고,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정부, 법원, 국책은행 T/F가 지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T/F를 통해서 이 플랜의 방안을 2분기까지 마련해서 회생법원이 출범하면 이를 통해서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의 브리핑은 제가 일단 기본적인 자료들은 다 드렸고요. 그리고 좀 더 중요하게 설명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 4가지 꼭지에 대해서만 여러분께 설명 드렸습니다.

위낙 방대한 내용이고 또 굉장히 주제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뭉치에 다 자료 드리고 설명 드린다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또 국민들께 또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히 알려 드리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 금융위 기자단의 간사단하고 협의를 해서 형식을 조금 바꿔 봤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것은 내일 어쨌든 업무계획을 하니까 '저희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업무계획이 이것입니다.'라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주요과제의 한 4꼭지 정도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분야, 분야별로 오늘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 또 한 번에 다 다룰 수 없으니까 기자 여러분들의 조금 더 이해를 돕고 기사화하시기에 편하도록 쪼갠습니다.

그래서 금융개혁은 사무처장이 1월 12일에, 가계부채 관리, 취약계층 지원확대, 실물경제 지원강화 이 네 파트로 나눠서 오늘 설명 드렸던 부분 중에 좀 더 자세한 내용, 혹은 오늘 빠진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기자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혹은 기사를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브리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계부채 관련해서 할애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연체이자율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합리화라는 것이 인하요인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 하나하고요.

또 차후에 추가로 하시는 부분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장관님의 의지와 워딩이 필요해서 오늘 여쭙는 것이니 양해를 해주신다면, 금융개혁 관련해서 사실 지난 연말에 금융개혁추진위원회가 해체가

됐고, 상시적 개혁체제로 전환한다고 하셨지만 원래 금융개혁이 박근혜정부의 4대 과제이기도 했고 그래서 추진위원회도 해체됐기 때문에 금융개혁 동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또 어떤 의지를 끝내 임기 중에 가져가시고 싶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체이자율이 인하요인이 있는 것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연체이자율은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도대체 연체이자율은 왜 기준금리가 내려가는데 왜 연체이자율은 안 떨어지지?’, ‘왜 연체이자라는 것이 무슨 근거로 만드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금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달금리에다가 그다음에 가산금리라는 것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이자율입니다. 그리고 그 실태에 대해서는 작년 말쯤에 한번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서 가산금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금융규제 운영규정이라고 해서 지금 권한대행께서 사인하신 총리령으로 ‘금리에 대해서 올리라, 내리라 하지 마라.’라고 분명히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함부로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혀 손 놓고 있고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공시를 해야 합

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교공시 체계를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만들고, 또 그 공시도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된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요.

두 번째, 적어도 합리적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그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금리산정 체계, 혹은 연체이자율 체계는 그것은 금융 소비자를 위해서나 혹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이자율들, 혹은 연체이자율 이것이 되고 있는지 하는 여부를 파악해서 합리적 기준을 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디 ‘연체이자율을 인하, 압력’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연체이자율에 대한 저희가 합리적 기준을 이제는 정상적인 이자율 이외에 연체이자율에 대해서도 지금쯤은 앞으로 금리인상에 대비해서 저희가 설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요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얘기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요인들, 자, 정상적인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것 플러스, 연체가 발생하면 어떤 비용이 금융회사에서 발생할지, 그 발생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들을 널리 전파를 해서 소비자들이 부당한, 그런

연체된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부당한 비용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개혁은 금융개혁위원회를 저희가 작년 말로 해서 일단 한 것은 이것을 상시적인 금융개혁 체제로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금융개혁의 시스템은 금융발전심의회, 원래 그것은 저희가 '금발심'이라고 해서 운영을 했었죠. 이쪽으로 업무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금발심으로 전부 통합해서 금융개혁업무를 계속 추진한 것이고, 금융개혁 업무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무처장이 12일에 브리핑을 할 텐데, 많은 내용이 사실 또 담겨 있습니다.

지주회사 관련한 부분, 회계제도와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금융개혁 과제 현재로서 발굴되어 있는 과제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개혁은 이 정부에서 당연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핀테크, 그리고 각 제도권별로 작년에 자본시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5+1의 과제 추진, 그다음에 성과연봉제로 대표되는 성과중심 문화의 정착, 이런 금융개혁 과제는 여전히 저희가 시장에 안착시키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하는 노력은 금발심 중심으로 해서 계속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DSR의 경우에는 지난해 9월 자율적인 참고지표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아직 첫걸음이긴 하지만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역차별 논란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막기 위해 '프리패키지 플랜'을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부실기업 인수시장 활성화나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이 기존에 사모펀드나 별처펀드를 좀 더 시장자율적으로 활성화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DSR의 공급을 신청원에서 시작했는데, 아직 공과를 평가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이제 DSR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금융회사들이 연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고민하고 있는 이런 단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가계부채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 틀은 DTI로 이뤄지고 있고, LTV·DTI 시장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를 기초로 해서 주담대 등이 취급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럴 경우에 우리가 선진형의 심사관행을 정착하는 데 부족한 것이고, 또 '감독지표로서 DTI는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좀 더 DSR이라고 하는 선진형 감독지표를 우리도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되었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DSR을 평가하기는 이르다.

또 DSR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인프라의 작업, 즉 '신청원', 신용정보원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진전이었고, 그것에서 DSR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아무튼 이것이 잘 유도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 심사관행을 바꾸는 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건전성 감독을 하는 데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로드맵을 가지고서 진행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역차별이라고 하셨는데요. 역차별이라고 하셨죠? 어떤 게 역차별인지 제가 잘...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질문>** 역차별 부분은 채무가 많거나 마이너스통장의 경우에는 이런 서민들한테 자금융통이 어렵다는 역차별을 말씀했습니다.

**<답변>** 부채가 많으면 추가적인 부채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뭐냐 하면 상환능력 내에서 부채를 가져가야 한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도 흔들릴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금융회사도 건전해지고 우리 사회도 부채의 어려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는 기본적인 철학이자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더 어려워진다. 그것은 서민금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민금융을 5조 7,000억에서 7조로 올해 늘립니다.'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한계차주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을 합니다.' 하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지,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 빚을 받는 데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의 어려운 계층의 문제는 또 다른 정책 차원에서 보완되고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진해운 케이스를 피하기 위해서 프리패키지드를 도입한 것은 아닙니다. 한진해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한진해운이 워낙 뇌리에 남으셔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프리패키지드 제도라는 것은 현재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즉 워크아웃 아니면 자율협약이 과정을 가지고 해 보니까 과거와는 달리, 제가 옛날에 했을 때하곤 달리, 옛날에는 그저 금융회사만 모이면 그 회사의 채무조정 혹은 신규자금 지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이것이 안 되느냐 하면 시장성 부채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즉 회사채, CP, 그다음에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그래서 채권단만의 힘으로서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또 시간이 필요하고, 또 채권금융기관에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채무자들까지 포괄해서 구조조정을 하려니 이것은 법정관리, 즉 회생절차에 넣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각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라고 하는 2가지 틀을 보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워크아웃은 신규로 빨리 결정할 수 있고, 구조조정을 빨리 결정할 수 있고, 신규자금을 쉽게 채권단만 합의하면 집어넣을 수 있는데, 법정관리는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법원의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니까. 또한, 법정관리라고 소위 말해서 낙인이 찍히면 금융회사들이 신규자금을 집어넣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각각 따 보자. 어떻게 따느냐? 채권단이 회생계획을 만들고, 즉 정상화 계획을 만들고, 그 안에는 신규

자금 집어넣는 것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법원에서 즉시 인가를 해 줍니다. 뭐 즉시라는 것이 바로는 아니겠지만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인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인가해 준 회생계획안은 채권 금융회사들만 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소위 말해서 워크아웃 밖에 있는 채권자들, 예를 들자면 시장성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상거래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외국금융기관 이것까지 모두 포괄해서 귀속을 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기업 정상화에 신규자금들도 지원되고 그리고 채권의 포괄범위도 넓어지고 해서 유효하게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법원과 T/F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 기업 실행, 우리 금융회사에 적합한 모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운용하는데 금융위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것입니다. 법원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래서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을, 이제 달라진 기업환경, 달라진 부채구조, 달라진 금융환경하에서의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로서,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챕터11과 같이 구조조정의 틀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질문> 가계부채 관련해서 일단 하나 여쭙볼게요. DSR은 그러니까 앞으로 표준모형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개별대출에 대한 획일적인 대출상환으로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

60% 이런 선을 정하지는 않는다는 뜻인 것 같은데.

<답변> 네, 그렇게 굵지 않는다는 것이죠.

<질문>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금융위가 만드는 표준모형에 어느 정도면 그 DSR이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그게 결국 금융회사의 상한기준이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 그 표준모형은 용역에 의해서 만드는데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각 금융회사별로 그 표준모형을 받아서 자기 금융회사에, 각자의 금융회사의 관행이나 대출 성향이나 혹은 자산운용 방향에 맞춰서 어떻게 조정하는 것은 금융회사 자율에 다 맡겨놓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학술적인 의미에서의 표준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형을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소위 말하는 best practice를 하나 던져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각 은행별로 혹은 2금융권도 마찬가지로 하겠지만, 금융회사별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각 자율에 맡겨놓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개별지표를, 한 기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게 DSR을, DTI 수도권 60% 이렇게, DSR 수도권 50%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캐나다나 홍콩 같은 경우에 보면 캐나다는 44%, 그리고 홍콩은 주담대 50%로 해서 직접적인 규제를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DSR 규제를 직접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직접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DSR이 되느냐를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 금융회사 자율에 맡겨놓고, 다만 간접적인 감독지표로 활용합니다. DSR이 전체적으로 어느 일정 수준을 너무 높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일정 부분을 한도를 정해서 그 한도 내에서만 '그 정도 운영해라.' 라고 정하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미국, 영국의 경우는 하고 있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2019년 이후에 감독당국에서 또 판단을 하겠지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에 의하면 그것을 간접적인 감독지표로 2019년 이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예, 이것은 사후적인 여신관리상의 문제겠지요. 물론, 첫 번째는 차주가 금융회사에 와서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사실 실직이 돼서 제대로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까 원금상환을 일단 유예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갚지 않도록.

특히, 이게 왜 필요하냐면 말이죠. 저희가 분할상환구조로 이제 전체적인 금융권의 한 50%를 분할상환구조로, 올해 기준으로 55%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금상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할상환구조에 맞든 또 차주의 보호대책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주가 실직, 뭐 여러 가지 갑작스런 사유로 인해서 원금상환이 어렵게 되면 금융회사에 찾아오도록 하고, 그래서 연체 발생

이전에라도 빨리 원금상환을 유예해 줘서 연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역시 차주가 적극적으로 금융회사에 요청해야 되겠지요. 또 그러한 안내를 금융회사가 차주들에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기업구조조정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암코는 시장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을 위해서 이제 금융위에서 출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채권단과, 채권은행과 채권매각이 잘 조율이 안 돼서 사실상 국책은행인 산은과 주로 매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유암코가 그러면 올해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는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예, 실패했다고 하시니까 실패가 아니라고 또 말씀을 드려야 돼서... 유암코가 지금 구조조정기업들을 주로 산은에서, 지적하신 대로 사들여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암코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로, 즉 은행이 부실기업을 팔아넘기는, 손실을 실현시키면서 팔아넘기는 이런 관행들이, 또 매각가격의 소위 말해서 차이로 인해서 잘 안 팔리는 이런 등의 구조조정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겠지요. 이런 이유를, 이런 문제를 유암코도 같이 지금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암코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신용위

협평가를 엄격히 하겠다.’, ‘매각가격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독립적인 중립기관에서 가격을 정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매수세를 늘려 주겠다.’ 하는 이런 방향의 시장구조를 바꾸는 일로 인해서 유암코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좀 더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유암코뿐만 아니라 기업구조조정펀드, 즉 경영참여형펀드 PEF들이 좀 더 많이 출현을 하고 이런 제도적인 틀이 만들어진다면, 또 유암코가 이를 선도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단박에 다 이런 시장이 형성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도가 작년에 유암코를 통해서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는 제도 보완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출현한다고 하면 펀드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활발하게 은행이 구조조정기업을 털어 내고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이런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가겠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시장이,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에서 법원을 통한 프리패키지드 플랜, 혹은 시장에 매각해서 처리하는 이런 방식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제도 보완을 올해 중점과제로 하겠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유암코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저희가 ‘기능을 어떻게 더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설명을 할 때 금정국장이 추가적으로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여쭙보겠습니다. 하나는 신 DTI 기준이 앞에서 말씀 설명해 주신 대로 대출한도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정책을 짜셨을 때 이것을, 대출을 규제하려는 의도인지, 뭔가 의도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취지 좀 여쭙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구조조정 관련해서 구조조정의 또 다른 한 축인 자율협약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분에 대해서 법적구속력이 없다.’라는 지적도 있고, ‘자율협약제도가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방안이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개선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답변> 첫 번째 신 DTI가 의도가 있느냐? 의도가 있죠.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예에서 보셨듯이 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단순하게 소득을 계산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앞으로 미래소득도 감안해 주는 것이 맞고, 보유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가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이 창출해 내는 소득능력도 정교하게 만들어 줘야 하고.

그러니까 DTI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즉 분모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소득에 관한 여러 가지 정교함이 없었다.’, 분자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였었느냐? 분자에서는 ‘기타대출, 주담대 이외의 기타대출의 원금상환 규모가 반영되지 않더라.’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윗부분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DSR를 통해서 우리가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고, 신 DTI라는 것은 분모 부분, 즉 소득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신 DTI를 하겠다. 그런데 이 소득 부분을 개선하게 되면, 이것은 DTI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바로 가져가게 됩니다. DSR에도 바로 가져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DSR이나 DTI나 분자만 다를 뿐이지, 분모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가계부채의 상황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여신심사를 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율협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왜 빠져 있느냐?’ 사실은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게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여기에는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워크아웃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대표적인 거라서 그랬는데, 자율협약 역시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이거든요. 그것이 갖는 한계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이 필요하더라. 그것이 무엇이나? 두 가지이다. ‘시장친화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법원에 조금 더 큰 공적인 귀속력을 우리가 받아서 하든가.’ 하는 식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올해는 구조조정을 일관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본격화할 수, 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뭐냐? ‘회생법원이 출범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맞추어서 저희가 구조조정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정책금융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산은에 약 20조 원 신성장자금 이게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20조를 어떻게 쓰시는 것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면...

<답변> 20조 원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고요?

<질문> 네, 그런 것 하고요. 오늘 브리핑 내용과는 관계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1년 정책을 발표하신 것인데 일단은 지금 앞으로 지금도 정상적이지 않은 정부가 유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또 대선이 치러져서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그런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런 식의 변화에 따라서 금융위가 갖고 있는 올해 계획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지속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혹시 하시는 부분은 없는지, 또 만약 그렇다면 하면 그런 부분들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네. 20조 원은 4차 산업혁명 분야와 관련한 신성장 분야에 지원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산업 분야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ICT와 제조업의 융합, 혹은 제품 생산에 있어서의 커스터마이징(customize) 이런 것들을 이루는 과정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주로 공급되는 분야는 밑에 9대 테마 있죠? 이 9대 테마 분야에 공급되는 것입니다만, 그것이 산업혁명적인 의미, 아까 말씀드린 ICT와 제조업의 융합, 생산의 커스터마이징화. 예를 들면 AI, 바이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분야일 것이고요. 이런 분야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체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하는 분야 문제는 추후 금정국장이 별도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변화에 따라서 금융위의 정책방향이 바뀔 수 있지 않느냐?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와서 지금 만들어놓은 이 금융위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가감을 당연히 하는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 오실 행정부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감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평가와 또 다른 국정철학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보완하거나 혹은 더해지겠지만, 그전까지 제가 해야 할 몫은 그전까지의 일관된 금융정책인 만큼 현재의 계획에 대해서 저희 금융위 직원들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해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가감 역시 금융산업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감은 나중에 금융위 기자님들께서, 우리 기자단께서 나중에 다시 평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로서는 올해 꼭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계획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프리패키지드 플랜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법정관리라, 그러니까 이 안에 플랜에 들어갔던 기업의 비협약 채권자들은 그러면 협약 채권자들처럼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될 경우가 올 수도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고생을 했는데, 그 과정이 조금 더 덜어낼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네, 당연히 그것이 프리패키지드 플랜의 장점인 것입니다. 통상적인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기업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채권자들의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이 신고 받은 전체적인 채무를 기업이 살아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haircutting을 할 것인가, 채무조정을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법원이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권단 집회에 상정해서 채권자의 일정 수 이상이 찬성하면 그게 기업정상화의 계획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새로운 자금을 내는 것을 금융회사들이 피하고, 또 이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채권자집회를 해서 의결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이해조정이 매우 어렵고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 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법정관리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법정관리에 가게 되면 기업이 정상화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프리패키지드 플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채권단이 '이 기업의 전체적인 협약, 비협약 채권을 어떻게 조정해야 이 기업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업이 살기 위해서 신규자금을 우리가 어떻게 대겠습니까.'라는 정상화 계획을 전체적으로 마련합니다. 그것을 법원으로 가져가요. 그러면 법원이, 종전에 법원이 만들던 것을 이 계획을 보고 이게 가능하겠다, 안하겠다는 것을 법원이 판단을 해서 인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절차가 단축되죠. 시간이 단축되죠. 또 여러 가지 신규자금지원이 가능해 지죠. 왜냐하면 법정관리 들어가면 신규 자금지원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인가받은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업이 정상화를 훨씬 신속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는 제도, 이것이 프리패키지드 플랜입니다.

그래서 회생법원 출범을 계기로 이 제도를 도입해 나가자, 하는 것이 법원의, 법원과 저희가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관심사이고, 이것을 저희가 1/4분기 중에... 1/4분기 저희가 마련을 하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느냐? 회생법원의 여러 가지 사무규칙, 내부적인 업무절차에 관한 프로세스에 관한 규정들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다 반영되게 됩니다. 이런 제도들이.

<질문> \*\*\*

<답변> 예, 그것을 미리 얘기한 셈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DTI·LTV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계부채에 대해서 총량규제, LTV·DTI 움직이는 것, 이것 가지고 가계부채 관리는 안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 고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단 DTI는 60%로 유지한다는

것이 현재의 계획이고, 다만 DTI를 보다 정교화하겠다는 것이 올해 업무계획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작년에는 ISA나 클라우드펀딩이나 코넥스의 활성화, 테슬라 이런 자본시장계획에 대해 많이 하셨는데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두드러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자본시장계획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장관님께서 작년에는 월세입자투자몰 관련한 방안을 많이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계획대로라면 작년에 이미 입법예고가 됐어야 됐는데 아직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가 월세자금투자몰이죠?

<질문> 네.

<답변> 자본시장에 관한 것은 사실 김태용 국장이 저기 있습니다만, 작년에 금융개혁의 제가 생각하면 한 절반 정도는 자본시장의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만, 자본시장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자본시장의 그동안 조치들을 어떻게든지 시장에 안착시키는 노력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펀딩에 대해서 보완방안도 지난번 발표했고, ISA는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ISA를 더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이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회계제도 개혁 이것은 그동안 수출산업 회계제도

개혁, 외감법 잇그저께 입법예고한 것 이런 것이 계속 나왔지만 마무리하는 회계제도 개혁도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무처장이 설명할 것이고요.

그래서 자본시장에 관련한 것은 작년에 많은 개혁과제들을 올해 시장에 안착시키는 데 일단 주력해 보자고 우리가 판단했고, 저희끼리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판단하에 업무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아이템이 자꾸 나오지 않는 것은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것을 잘 정착시키고 안착시키고 기능을 발휘하는 데 주력하겠다.' 아울러서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제도 개혁 등 여러 가지 제도도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 고쳐 나가겠습니다.

월세투자몰의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 업무계획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에 대해서 중간에 한번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구조로 하겠다.'라고 한번 발표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적정한 사업이 물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만 만들어 놓고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정한 사업이 물색이 되어서 그것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적정한 사업을 물색하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정하지도, 적정한 사업이 판단되지 않은 상황에

서 딱 하니 제도만 시행하고 돈을 받기 시작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시행은 반드시 적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전한 사업이 전문가들로 하여금 확보가 되었다는 그런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저희가 시장에 내놓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세자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자금입니까? 그래서 이런 여건이 갖춰질 때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늦어지고 있고, 또 그런 것이 되기 전까지는 결코 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린 것 말고도 저기 있는 우리 처장·국장들이 설명드릴 아이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향후 업무계획을 하다 보면 그냥 정책자금 공급, 가계부채의 관리방향 이런 것만 사실 지면의 제약이 있으시니까 많이 다루시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궁리 끝에 '이것을 쪼개서 한번 설명해 보자.' 한 것이고, 제가 오늘 가져온 설명은 한 절반 정도 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처장과 국장이 아주 잘 설명 드리고, 또 새로운 아이템도 보도하시기 적합하게 드릴 테니 그때도 꼭 좀 오늘과 같은 관심을 가지고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마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